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721호
2019. 8. 19

정책동향

-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선순환 동력 될 수 있으나
- ▮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일몰 후 대책 강화 필요

시장동향

- ▮ 상반기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0.9% 늘어

산업정보

- ▮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재해 발생 분석
- ▮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건설논단

- ▮ 건설업 여성인력 활용, '마초적 현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선순환 동력 될 수 있나

- 위축된 건설경기에 대응 가능한 단초 마련, 이행 여부 철저히 확인해야 -

■ 정부,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8월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함.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여 ① 작년 6월 발표한 업역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 방안의 조기 안착 지원, ② 양질의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 ③ 최근 건설경기 지표의 하락세¹⁾에 대응 등 3가지 목적을 이루려고 함.
- 적정 공사비 및 공기 확보, 입찰제도 개선, 신규 물량, 고부가가치 분야 지원 확대로 크게 요약할 수 있는 이번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표 1> 참조).

<표 1>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주요 내용

구분	추진 과제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6건의 개선 과제 선정, 즉시 개정 작업 착수해 연내 완료 목표 추진 -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 통보 면제 - 해외건설 상황 보고 등 관행적 통보 내용 대폭 간소화(기존 4번 보고 → 준공보고 1번으로 같음) - 건설사업자 업종 추가시 자본금 특례제도를 기존 제도 신설(2010.2.11) 이전까지 소급하여 완화하였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 - 시공능력평가 실적 산정시 관급 자재비용을 포함해서 반영 - 실적관리 시스템(CEMS)을 통해 건설기술인의 복수 용역 수행 여부 확인 및 관리 일원화 - 건설기술인 인정 국가기술자격 범위 확대(설비보전기능사, 잠수기능장 추가) 등 	
공사 수 과정 여건 개선	가격 산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산정 체계 개선 - 표준시장단가 : 실거래 차이가 큰 공종 우선 개정, 실제 시공가격 반영 등 - 표준품셈 : 사회 변화에 따라 노후시설 유지보수 품셈 및 ICT 공사 품셈 마련
	입찰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2019.1) 본격 시행 -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확대(300억 → 100억원 이상) -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 가격평가 및 기초금액 산정 합리화 추진 •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 - 공공기관 입찰조건 전수 조사를 통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 지시 등 불공정 입찰 조건 개선

1) 건설 수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2019. 1~6월)했고, 건설투자는 3.5% 감소(2019년 2분기)함.

	<p>시공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관련 보증수수료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직불제 의무화(2019.6)에 따라 임금 체불이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수수료 인하(10% 내외) 추진 - 건설한 중소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증수수료 특례 확대 추진 • 균형발전 및 공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청-하청 상호협력 평가 결과의 공공 입찰 반영 및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 강화 • 공기 연장 간접비에 대한 지급 요건과 범위, 산정기준 개선 적극 검토
	<p>적정 SOC 투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집행 예정 사업 신속 추진 및 대규모 사업 조기집행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TX-A(3조원), 신안산선(3.3조원), GTX-C(4.3조원), 수서~광주선(0.9조원), 수색~광명(2.4조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 신속 추진 -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 금년 내 착공,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 금년 내 설계 착수 추진 - 평택~오송2복선화(3.1조원), 춘천~속초(2.1조원), 남부내륙철도(4.7조원) 터키방식 적용 검토 - 도시재생 뉴딜(20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 차원의 건설투자 사업 지속 추진
	<p>우수인력 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우수 건설인력 양성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기능장이 우수 건설인력을 도제식으로 육성하고, 훈련생의 희망에 맞춰 정규 직 채용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기관과 건설업계 간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p>新 부가가치 지속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2020~2025년) 2,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R&D) 본격 시행을 통해 스마트 건설 핵심 기술 조기 확보 -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다양한 시범사업(26건) 및 스마트 터키사업(1~2건) 추진을 통해 스마트 건설 기술을 건설공사 쏠 공정에 확산 적용 유도 • 고부가가치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도급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 등 금융 지원 강화, 핵심사업 국가별 맞춤형 전략 추진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및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개최,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확대를 통해 해외 수주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철저한 이행 여부 확인과 후속 과제 발굴 뒷받침되어야

- 정부가 최근 대내외적 환경 변화 및 계속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위축된 건설경기의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한 점은 매우 시의적절함.
 - 특히, 집행 예정 SOC 사업의 신속 추진과 조기 집행 유도를 위해 개별 사업별 목표 기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점은 매우 환영할 만한 사항임.
- 다만, 기존 대책(민주당 공공건설 상생협력 선언식,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은 아쉬움.
- 무엇보다도 더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철저한 이행 여부 확인과 계속된 후속 과제 발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전영준(부연구위원 · yjjun@cerik.re.kr)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일몰 후 대책 강화 필요

- 일몰 기한 내 신규 사업 난망, 이젠 일몰 후 공원 조성 전략으로 전환해야 -

■ 도시공원 일몰 시한 1년여 앞으로 다가와²⁾

- 공공 재원 조달의 한계 때문에 미집행된 채로 방치된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하 특례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특례사업은 제안·공모부터 집행 인정 시점인 실시계획 인가·고시까지 최대 24개월이 소요되므로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한까지 신규 사업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특례사업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일몰 후 공원 조성 전략이 △ 공원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를 도입하거나, △ 조성 재원이 재정 의존적이어서 민간 투자가 극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임.
- 정부와 지자체가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지속적으로 경주하였음에도, 8월 현재 공원조성 계획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광역지자체가 12개소에 달함.³⁾
 - 이 때문에 일몰제 대응 우수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원 해제 용지에 대한 추가 규제⁴⁾와 재정에 기반한 조성 전략만으로는 양질의 공원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본 고에서는 일몰 후에도 특례사업이 공원 조성 전략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특례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사업 대상 확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대상 확대 및 인근 공원 용지와의 번들링 허용

- 현재 특례사업의 대상이 되는 공원 용지의 최소 규모는 당초 최소 규모인 10만㎡보다 한층 작은 5만㎡로 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중소 규모 근린공원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국토교통부(2016)는 최소 규모를 1만㎡로 완화한 제도를 검토하였고, 일본에서도 최소 단위를 1만 4,200여㎡로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특례사업의 대상 확대를 통한 중소 규모 공원 조성을 촉진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본 고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참여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3) 국토교통부(2019. 8. 15)에 따르면 ① 제주(100%), ② 광주(91%), ③ 부산(81%), ④ 인천(80%), ⑤ 전북(80%)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가 공원조성 계획률(공원조성 계획면적/실효 대상)이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일몰제를 적용받아 공원에서 해제되는 용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새로 지정하는 등 일몰 후 새로운 규제를 적용함.

- 뿐만 아니라 현재 「공원녹지법」 규정에 의하면 공원 용지의 분할 개발은 가능하지만 통합 개발은 어려워 도시 내 산재해 있는 공원을 특례사업으로 개발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점을 노정할 바 있음.
 - 1만~5만㎡의 장기 미집행 공원도 특례사업의 대상으로 편입하고, 분산된 공원 용지의 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금융 구조 개선) 현금 예치금제도 개선 및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 규정 제정 필요

- 높은 수준의 예치금 의무 납부 비율과 일률적인 납부 방식은 금융비용 상승의 요인이 됨.
 - 다만, 예치금의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현금 예치금은 토지비의 80% 수준으로 매우 높으며, 납부 방법 역시 현금 납부로 일원화되어 있어 반드시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큼.
- 또한, 소관청의 예치금 반환 의무가 없고 반환 일정이 명확치 않아 이율이 상승할 수 있음.
 - 일부 지역은 실제 반환 채권의 발급을 거부해 사업자의 금융비용 상승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 예치금 납부 비율을 일부 하향 조정하거나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 방식 개선) 공원 실효 시점 이후 계획시설이나 용도구역으로 재지정할 경우 사업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민간제안 공급촉진지구를 확대 시행해 임대형 사업 모델 확산 필요

-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몰제 이후 정부는 해제된 공원 용지를 계획시설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할 뜻을 내비쳐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다시금 재현되고 있음. 이는 대법원 판결 요지와 상반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최근 LH가 특례사업에 적극 투입되고 있는데,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나 민간사업 역시 임대주택 의무 비율 등 다양한 규제가 작동하고 있어 근본적 차이는 크지 않음.
 - 공원 실효 후 공원 용지로 재지정하는 경우 신속한 공원 조성을 위해 사업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LH가 추진하는 공급촉진지구를 민간과 공동으로 제안해 사업 모델의 개선을 꾀해야 함.

■ 특혜사업 아닌 특례사업, 일몰 후 출구전략으로 진화해야 장점 극대화 가능해

- 특례사업은 그 목적상 일몰제 적용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해야 종료할 수 있는 사업임. 민간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특례사업을 배제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을 충분히 활용하는 ‘park 3.0’ 시대에 걸맞은 공원 조성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김성환(부연구위원 · shkim@cerik.re.kr)

상반기 건설 수주, 전년 동기 대비 0.9% 늘어

- 민간부문 1.0% 감소 · 공공부문 7.0% 증가,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아 -

2019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 민간부문에서 소폭 부진했지만 공공은 양호

- 대한건설협회가 집계한 2019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 분석 결과, 민간부문은 부진했지만 공공부문이 양호해 전년 동월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1~6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24.6%, -9.6%, 35.9%, 29.2%, -21.6%, 2.7%의 증감률을 기록하는 등 등락을 반복함.
 - 그 결과 1~6월,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72조 824억원을 기록함.
 -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아 금액상으로도 양호했던 것으로 분석됨.

공공 수주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이 양호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

- 올 상반기 공공 수주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18조 4,585억원을 기록함.
 - 토목 수주의 경우 철도와 토지조성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한 12조 2,703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의 경우, 상반기 실적으로는 4년래 가장 부진한 1조 8,213억원을 기록함.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여 18.5% 감소함.
 - 한편, 비주택 건축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한 4조 3,668억원을 기록함.

<표 1> 2019년 상반기 국내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8. 1~6월	71,421.9	17,243.7	10,831.2	6,412.5	2,235.6	4,176.8	54,178.3	10,551.9	43,626.3	23,278.3	20,348.1
2019. 1~6월	72,082.4	18,458.5	12,270.3	6,188.1	1,821.3	4,366.8	53,624.0	9,440.7	44,183.2	25,297.0	18,886.2
증감률	0.9	7.0	13.3	-3.5	-18.5	4.5	-1.0	-10.5	1.3	8.7	-7.2

자료 : 대한건설협회.

■ **민간부문은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가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 상반기 민간 수주는 토목과 비주택 건축 수주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53조 6,240억원을 기록해 금액상으로는 양호했음.
 - 토목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9조 4,407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25조 2,970억원을 기록함으로써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비주택 건축 수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한 18조 8,862억원을 기록함. 다만, 감소하였어도 상반기 실적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아 금액 자체로는 준수했던 것으로 분석됨.

■ **건축은 사무실 및 점포 제외하고 모두 부진, 토목은 기계설치, 철도 등 일부 공종 양호**

- 건축 공종 수주의 경우 사무실 및 점포를 제외하고 다른 공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음(<표 2> 참조).
 - 사무실 및 점포 수주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 건물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2.0% 소폭 감소했음. 공장 및 창고와 관공서 수주는 각각 20.5%, 14.0% 줄었으며, 기타 건축 수주도 49.4% 감소해 부진한 모습을 보임.
- 토목 공종은 기계설치와 철도 및 궤도, 그리고 항만 및 공항 등의 수주가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남.
 - 도로 및 교량과 토지조성 수주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2%, 1.1% 감소하였으며, 특히 발전 및 송전 수주는 80.2%나 감소해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
 - 기계설치 수주는 화학플랜트 수주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하였으며, 철도 및 궤도 수주는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 및 GTX 수주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7.7% 급등함.
 - 한편, 항만 및 공항 수주는 항만과 부두시설 공사가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9.6% 증가함.

<표 2> 상반기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기계설치	철도 및 궤도	도로 및 교량	토지조성	발전 및 송전	항만 및 공항
2017. 1~6월	29,109.6	8,783.1	7,586.8	2,404.4	1,186.8	3,483.6	349.5	3,735.7	1,775.5	5,758.2	773.1
2018. 1~6월	28,518.5	9,992.0	6,030.1	2,067.3	601.0	3,914.9	3,661.5	2,906.5	1,756.1	1,142.0	924.6
증감률	-2.0	13.8	-20.5	-14.0	-49.4	12.4	947.7	-22.2	-1.1	-80.2	19.6

자료 : 통계청.

박철한(부연구위원-igata99@cerik.re.kr)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망재해 발생 분석

- 2017년 기준 사고사망자 수 506명, 3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34.8% 발생 -

■ 3억원 미만 건설사업, 전체 건설업 사망재해의 34.8% 차지

-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506명이었음. 그중 3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이 사망하여 전체의 34.8%를 차지함.
 - 공사금액별 사망재해 현황을 보면, 3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176명(34.8%)로 사망재해가 가장 많았음. 3억~20억원, 20억~120억원, 1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각각 109명(21.5%), 99명(19.6%), 111명(21.9%)임.

<표 1> 공사금액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수

구분	계	3억원 미만	3억~20억원 미만	20억~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분류 불능
2017년	506	176	109	99	111	11
2016년	499	159	119	101	107	13
증감	7	17	-10	-2	4	-2
증감률	1.4%	10.7%	-8.4%	-2.0%	3.7%	-15.4%

자료 : 건설 중대재해 사례와 대책(2018.5), 산업안전보건공단.

- 2017년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2016년의 499명에 비해 1.4% 증가하였음. 하지만 3억원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2016년의 159명 대비 약 10.7% 증가하여 차이를 보임.
 - 타 구간 건설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120억원 이상에서 동 기간 3.7% 증가하였으며, 3억~20억원 미만과 20억~12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는 각각 8.4%, 2.0% 감소하였음.

■ 3억원 미만 건설사업 원도급사의 약 88.8%는 전문건설업체

- 2017년 원도급 사업 수는 66만 8,258개로 추정되는데, 이 중 3억원 미만 사업 수가 58만 4,477개로 전체의 약 87.5%를 차지함.
 - 건설업 원도급 사업 수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실적 신고 건수(계약액 기준)로 추정함.
- 공사금액별 원도급 사업을 수행한 업종을 살펴보면, 3억원 미만에서는 전문건설업체가 약 88.8%를 차지하며, 타 구간에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비중이 높았음.

- <표 2>와 같이, 공사금액별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사업 비중은 3억원 미만 사업에서는 11.2%에 불과하며, 3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가 커질수록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비중이 높아짐을 알 수 있음.

<표 2> 공사금액별 주업종별 원도급 사업 수

구분	계	3억원 미만		3억~20억원 미만		20억~120억원 미만		120억원 이상	
		사업 수	%	사업 수	%	사업 수	%	사업 수	%
계	668,258	584,477	100.0	56,388	100.0	20,952	100.0	6,411	100.0
종합건설업체	131,417	65,532	11.2	40,703	72.2	18,855	90.0	6,327	98.2
전문건설업체	536,841	518,945	88.8	15,685	27.8	2,097	10.0	114	1.8

자료 : 2017년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 실적 신고 건수(계약액 기준).

■ 소규모 공사 사망재해 저감을 위한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평가제도 개선 필요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⁵⁾ 산정·평가제도는 발주자가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원도급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개별 종합건설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산정·공표하는 제도임.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평가제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산정 기준이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산정 대상은 1,000대 종합건설업체에서 전체 종합건설업체로 확대되었음.
 - 고용노동부는 개별 종합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매년 산정·공표하고, 이를 공공 건설공사의 PQ, 입찰찰 및 시공능력평가 제도 등에 활용하고 있음.
- 하지만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평가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소규모 공사에서 발주자가 안전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사를 선정하고 사고를 저감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2017년 기준으로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의 34.8%는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 발생하였으며,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약 88.8%는 전문건설업체에서 원도급사 역할을 수행하였음.
 - 이에 현행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 대상에 전문건설업체를 포함하여, 소규모 공사 발주자도 안전관리 역량이 뛰어난 원도급사(전문건설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수영(부연구위원·sooyoung.choe@cerik.re.kr)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위반 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

2015년 기준년 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 5% 하회, 국산 원부자재 사용 비율 하락 -

■ 2015년 건설산업의 총공급 규모는 2010년 대비 16% 증가한 209조, 7564억원

-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2015년 산업연관표⁶⁾에 따르면 건설업의 총공급(=총수요) 규모는 209조 7,564억원임. 2010년 대비 16% 증가한 규모이지만 2005년 대비 29% 성장한 2010년에 비해 성장률이 하락했음.
 - 전 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임. 이러한 수치는 2005년의 5.8%보다는 감소했으나 2010년의 4.7%보다는 증가한 수준임.
 - 건설업의 생산물 중 타 산업의 중간 투입물로 사용된 생산물의 비중은 5.3%로 2005년의 6.6%에 비해서는 하락했으나 2010년과는 동일한 수준임.
- 건설업의 최종수요를 구성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의 고정자본형성이 78.3%이고, 정부의 고정자본형성은 22.3%임. 2005년 이후 민간 고정자본형성의 비중은 증가하고 공공의 고정자본형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표 1> 건설업의 최종수요 구성 항목별 비중 추이

(단위 :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민간 고정자본형성	69.3	73.1	78.3
공공 고정자본형성	30.2	26.1	22.3
재고 증감	0.4	0.6	△ 0.7
수출	0.1	0.2	0.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 하락 추세 두드러져

- 생산유발계수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무한히 반복되는 생산 증가의 연쇄효과를 측정함.

6) 매 5와 0으로 끝나는 해를 기준 연도로 삼아서 작성되는 산업연관표는 1년 동안 한 국민경제에서 이루어진 모든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행렬 형식으로 작성하는 통계표임.

- 어떤 산업에 대한 최종 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등을 포함하는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하였을 때, 최종수요의 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늘어나면 총공급 규모가 이에 맞춰 증가함. 그리고 이것은 해당 산업의 생산에 중간 투입물로 소요되는 여타 산업의 생산물의 수요 및 생산 증가로 이어짐.
 - 상기한 여타 생산물의 생산 증가는 중간 투입물로서 소요되는 당초 최종수요가 증가한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수요를 또다시 증가시킴. 이처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의 연쇄효과는 무한히 반복됨.
- 2015년 산업연관표에 의하면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는 2.062임. 이는 건설업의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했을 때 위에서 언급한 연쇄효과를 통하여 건설업 생산을 포함해 전 산업에서 2.062단위가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함.
- 2005년 2.549, 그리고 2010년 2.250과 비교하면, 국산 원부자재의 투입 비중을 반영하는 생산유발계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건설업 세부 부문별로도 생산유발계수는 하락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표 2> 건설업의 생산유발계수 추이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건설업	2.549	2.250	2.062
주거용 건물	2.449	2.312	2.076
비주거용 건물	2.521	2.339	2.113
건축보수	2.469	2.337	2.135
교통시설 건설	2.512	2.352	2.197
일반토목시설 건설	2.338	2.273	2.055
산업시설 건설	2.864 ⁷⁾	2.395	2.034
기타 건설		2.311	1.91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 2015년 산업연관표를 통해 건설업은 민간과 공공의 고정자본형성 등 국내 수요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생산유발계수의 하락 추세는 국산 원부자재 사용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

빈재익(연구위원 · jipins@cerik.re.kr)

7) 2005년 소분류는 2010년 이후와 이 항목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2005년 분류에서 기타특수건설 항목은 2010년 이후 산업시설 건설과 기타 건설로 세분됐음.

건설업 여성인력 활용, 마초적 현장문화부터 바꿔야

작년 3월 뉴욕 타임스 일본판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일본은 건설업에 더 많은 여성이 진입하기를 원하지만, 분홍색 화장실(pink toilets)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다. 내용을 보니 건설산업 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여성 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의 ‘분홍색 화장실(분홍색 작업복, 분홍색 용접 마스크 등 여성 작업 환경을 비유한 말)’ 도입 정책이 일본 건설현장에 고착화된 젠더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일자리로 간주돼 왔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도 건설업의 여성 취업 비율은 매우 낮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全) 산업 취업 인력 중 여성인력의 비중은 42.9%이며, 제조업은 29.0%인데 반해 건설업은 9.9%로 여성 취업 비중이 6.7%로 최하위인 광업 다음으로 낮다.

건설업의 여성 취업 비중이 현저히 낮음에도 건설업에 진입하는 여성인력은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여성기술인은 10만 9,191명으로 지난 13년간 연평균 3.9%씩 증가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통계에서 나타난 현장 여성 기능인력도 역시 증가세로 2016년 말 6만 3,056명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7.1%씩 증가했다. 이와 같이 기술직과 기능직 양자에서 모두 건설현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여성이 증가해도 건설업에서 여성 취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Ground-breaking Women in Construction’이라는 제하의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건설현장에서 더욱 많은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성 엔지니어와 기능공 등 여성 전문 기술 인력들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논의의 초점이었다.

결론은 여전히 건설현장의 문화가 여성들이 발전하고 장기간 건설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데 장애가 되는 고질적인 이슈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앞서 일본판 뉴욕 타임스에 실린 건축현장의 슈퍼바이저로 일한 한 여성의 인터뷰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전히 건설현장의 남성들은 여성으로부터 지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성 감독자가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내기를 요구하면 히스테리컬하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남성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정도 낮은 임금과 강도 높고 불규칙한 작업 환경도 여성 인력이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IT나 자동차와 달리 건설은 잘 변하지 않는 산업이다. 그런 건설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4차 산업 기술이 건설업과 결합해 새로운 디지털 건설기술이 현장에 속속 도입되면서 건설 생산방식의 변화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우리 건설업에서도 남성 위주의 문화와 관행에서 벗어나 우수한 여성 인력을 활용해 청년 인력 부족 문제를 타개하고 인재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시기이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임신부 및 유아를 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남녀 노동자 간 임금 등 차별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 현 정부 들어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충분치 못하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기업과 건설현장의 남성 위주 문화와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제도 개선은 정책적 의지에 의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문화와 관행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 2019.7.29>

김민형(선임연구위원 · mhkim@cerik.re.kr)